

2014

연구보고서-16

I S S U E P A P E R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수행과제명 • 여성 •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II)


과제책임자 •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급*

수행과제명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과제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8

 e-mail: sypark@kwidimail.re.kr

요약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미비함. 현행법에 의한 스토킹 처벌역시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행위자 처벌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

1 배경 및 문제점

 1990년대 이후 스토킹 범죄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입법화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박선영·송효진·구미영·김정혜·유혜경(2014). 여성·가족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출생등록의무자 및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및 시사점.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되는 분야 중 하나임.

-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2007~2012년 상담 건수 중 33.1%가 데이트폭력 상담이었고, 데이트폭력 유형 중 41.2%가 스토킹에 관련된 것이었음.
 - 스토킹 가해자의 다수는 전 데이트 상대나 전 배우자, 현 데이트 상대라고 함.
- 이처럼 스토킹은 데이트 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처럼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기 쉬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또한 피해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폭력에 장기간 노출되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스토킹 행위자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 입법의 유형 및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을 별도로 구별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음. 2012년 3월 21일 경범죄 처벌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의 규율 내용에 포함되어,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1993년에 이르러 미 전역에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을 정도로 스토킹 범죄화를 신속하게 이루어냈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가 그 뒤를 이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일본, 네덜란드, 몰타,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 등도 스토킹을 범죄화하였음.
- 스토킹 규제 관련 입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각국의 스토킹에 대한 법적 정의로부터 몇 가지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음. 첫째, 벨기에를 제외한 입법례는 대체로 스토킹의 법적 정의로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동’을 요구한다. 둘째, 모든 법적 정의는 괴롭힘(harassment)이나 쫓아다님(pursuit)과 같은 개방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각국의 입법례는 차이에 따라 이를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 형법에 스토킹에 관한 조항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스토킹을 범죄화하였음. 일반법인 형법에 스토킹 규정을 두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을 규율하는 국가는 영국과 아일랜드, 일본 등이 있음.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는 구체적인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즉, 법률 자체에서 무엇이 스토킹 행위인지 혹은 괴롭힘(harassment)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음. 반면 미국과 호주 대부분의 주, 일본은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또한 각국의 입법례는 행위자의 고의의 정도, 즉 의지적 요소를 요하는지, 지적 요소만으로 충분한지, 미필적 고의로 충분한지와 과실범에 의한 행위 처벌 여부 역시 상이함. 각국의 입법례는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요하는지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임. 벨기에, 룩셈부르크, 헝가리, 폴란드, 네덜란드는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였음. 독일에서도 스토킹은 기본적으로 고소를 요하는 범죄이지만, 검사가 특별한 공익이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는 상대적 친고죄(relatives Antragsdelikt)임. 반면,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모든 스토킹 범죄는 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기소할 수 있음.

- 스토킹에 대한 최대형량은 3월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단일한 형량을 정하는 경우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형을 달리 정하는 경우로 크게 구별할 수 있음.

■ 스토킹 규제 관련 외국의 입법례

● 미국

- 캘리포니아 주 형법에서는 제15편 제2장 기타 범죄(other miscellaneous crimes)에서 스토킹 범죄를 다루고 있음. 제646. 9조는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규정하며, (e)항에서 (h)항에 걸쳐 “괴롭힘”, “일련의 행위”, “믿을 만한 위협”, “전자통신기기” 등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캘리포니아 주 민법 제1708. 7조 (a)항은 원고가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의 모든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경우 누구든지 스토킹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스토킹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 손해(general damages), 특별 손해(special damages)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s) 또한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미시간 주의 스토킹 방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내용을 지닌 스토킹 방지법으로 평가됨. 미시간 주 형법전은 제750. 411h조와 제750. 411i조에서 스토킹과 가중된 스토킹 등 오프라인 스토킹을, 제750. 411s조를 통하여 사이버스토킹을 규제하고 있음.

● 호주

- 퀸스랜드 주는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2회 이상 혹은 1회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의식, 두려움 혹은 폭력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켰

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에서 스토킹은 적어도 2회 이상 행해지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행위이며, 가해자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빅토리아 주는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을 요하지 않고,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행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인터넷이나 이메일, 기타 전자통신을 추적하는 행위, 피해자나 그 밖의 사람의 소유 하의 부동산에 침입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에 해당됨.

● 영국

- 영국은 「괴롭힘 방지법 (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에서 스토킹을 규율하고 있음. 이 법률은 1997년 제정되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적용되고 있음. 동 법률에서는 사람에 대한 괴롭힘과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 여기에서 괴롭힘이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일련의 행위로써 적어도 두 번 이상 반복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말로 하는 것도 포함됨.

● 일본

- 일본에서는 2000년 5월 24일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이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24일부터 시행됨. 이 법률은 스토킹 행위의 처벌요건과 피해자의 원조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법률은 스토킹 행위를 “따라다니기 등 행위”와 “스토커 행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음.

● 독일

- 독일에서는 제40차 형법 개정을 통하여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 독일 형법은 제1항에서 스토킹에 대한 기본구성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2

항에서는 생명, 신체의 안전, 건강, 자유 등의 법익이 침해될 위험
범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고, 제3항에서는 사망에 이른 경우
를 상정하여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
음. 다만, 스토킹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특별한 공익에 의해서
직권에 의한 형사소추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스토킹은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만 소추가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고 있음. 본 규정 가운데 특히 제1항 제2호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한 접촉)은 사이버스토킹과 관련이 있음.

● 기타 국가

-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체코공화국, 폴란드 등도 형법에 스토킹에 관한 조항을 도입하여 스토킹을 범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시사점 및 입법과제

● 시사점

- 각국의 입법례의 경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대부분의 입법례는 스토킹의 법적 개념요소로 ‘일련의 행위’나 ‘반복적 행동’을 요구함. 둘째, 스토킹의 범죄화는 대부분 형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특별법을 통해 규정한 예도 적지 않음(영국, 일본 등). 유의할 점은 스토킹 범죄화 역시 각국이 기존에 지녀 온 법체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임. 셋째, 각 입법례는 스토킹 처벌에 공포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등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에서 상이함. 넷째, 각 입법례는 기소를 위해 피해자의 고소를 요하는지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임. 다섯째, 각 입법례의 상이함과 별개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입법과제

- 위와 같은 입법례의 경향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입법과제를 제시할 수 있음.
- 우선 스토킹 행위는 비교적 늦게 ‘발견’되었지만, 근래 국가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당벌성과 형벌 필요성을 갖춘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은 반드시 범죄화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행위임.
- 스토킹을 범죄화한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존 형법 체계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된 경범죄처벌법상의 조문으로도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처리하는 데 부족함을 인정하고, 일련의 행동들을 범죄로 취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개념과 법 형식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법의 규율 방식을 피해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구제수단과의 균형 속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처벌 규정을 일반형법의 한 규정으로 도입할 것인지, 특별법에 마련할 것인지 여부와 별도로,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은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스토킹을 범죄화하는 경우, 이 범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특히 특별법으로 정할 경우 이 특별법의 목적조향을 어떻게 규정할지 문제가 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만을 보호법익으로 한정할 경우, 스토킹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의 기본권을 행사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보호법익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법적 평온 혹은 자유 일반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개입방안을 강구하되, 이를 이유로 보호사건으로의 처리 방식을 만연히 채택하여서는 안 됨.

3 정책제언

■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제정 필요성

- 우리나라에서 그간 스토킹과 관련한 입법적인 시도는 1999. 5. 24. 발의된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03. 10. 13. 발의된 「스토킹방지법안」, 2005. 9. 27. 발의된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05. 11. 28. 발의된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09. 1. 9. 발의된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 스토킹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2년 3월 21일 경 범죄 처벌법이 전면 개정되어 제3조 제1항 제41호에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표제 하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법률의 규율 내용에 포함되어, 비록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재의 경범죄 처벌법 규정은 단지 사후적 대처의 일환으로 형사처벌만을 상정하고 있어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형량도 극히 제한적임.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가 가능하고 스토킹 행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같은 중요한 측면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 필요한 시점임.
- 다른 형사특별법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스토킹 역시 형법전에 통일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임. 그러나 형법 개정이 용

이하지 않고 스토킹 범죄 피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는 현실적 이유 외에도,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고 우리 법제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스토킹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상을 제안한다는 취지에서 단일한 특별법 시안을 마련하였음. 보호사건으로의 처리를 배제하고 형사처벌의 일원적 구조를 채택하였음.

◎ 법안의 개요

● 법안의 구성체계

- 「스토킹 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 법의 목적과 ‘스토킹’의 정의 및 행위태양을 정하는 ‘제1장 총칙’과 형사처벌의 일원적 구조를 채택한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3장 스토킹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 또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4장 피해자보호명령’과 ‘제5장 벌칙’으로 이루어짐.
- 제1장은 총칙사항으로 입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것임. 제2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으로 스토킹의 금지, 스토킹살해에 관한 것임. 제3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등에 관한 사항임. 제4장은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 조사 등에 관한 것임. 제5장은 이법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것임.

● 법안의 주요내용

- 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제1장 목적조항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절차,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였음.

- 기존 발의안들은 법의 목적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으로 한정해 왔음.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행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공·사 영역을 불문한 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스토킹의 양상을 설명하기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본 법안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평온한 생활의 보호’를 목적으로 삼았음.
- 법안은 ‘스토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하여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조항이나 그간의 여러 스토킹 관련 법안은 스토킹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명명하거나, 지속성·반복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였음. 우리의 현행 법률이나 판례상 지속성과 반복성은 반드시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며,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지속성·반복성을 인정해 온 경향이 있음. 그러나 반복적인 행동이라도 지속성은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함.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지속성’이나 ‘반복성’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였음.
- 각 목에서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제시하였음. 입법례와 법률안 등을 참조하여 행위태양을 적시하되,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특정 행위가 규율 대상에서 배제되어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열거규정 방식을 채택하였음.
-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안 제3조 및 4조)
 - 법에서 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함. 또한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를 살해한 경우의 결합범 규정을 두었음.
 - 비교법적으로 스토킹 기본범의 형량 범위는 3월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다양하나, 기본범의 최대형량은 대부분 1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19대 국회의 김제남 의원안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낙연의 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함. 본 시안에서는 사람에 대해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형법상 폭행죄(2년 이하),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2년 이하), 채권추심법 제15조 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기본범의 형량을 1년 이하로 정하였음.

- 스토킹 행위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입시조치(안 제5조 및 6조)
 - 안 제5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음.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 지원 상담소에 연계해야 함.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음. 이러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긴급입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피해자, 신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음. 이 외에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 변호사 선임 특례,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등을 규정하였음.
- 상담시설 지정(안 제13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는 스토킹 행위로 인한 범죄 신고 접수 및 상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여기에는 피해자를 병원이나 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업무,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등이 포함됨.
- 피해자보호명령제도(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2011. 7. 2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법원은 가정폭력특별법에서 가정법원으로 하는 것과 달리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의 관할 법원으로 하였음.

◎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행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면회 또는 교제 그 밖에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진로 가로막기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 다. 따라다니거나 미행하는 행위, 또는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상대방이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주변에서 잠복하여 기다리기,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 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마.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말, 글, 부호, 음성,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2. “행위자”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제14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2장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3조(스토킹의 금지) ①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스토킹살인) 제3조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장 스토킹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스토킹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행위의 제지
2. 스토킹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연계
5. 제15조에 따라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

제6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피해자가 제15조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스토킹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8조에 다른 변호사를 말한다)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응급조치의 시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8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를 준용한다.

제9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¹⁾ ①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심리의 비공개) ①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

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상담시설)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스토킹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전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피해자보호명령

제14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스토킹 범죄를 관할하는 형사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15조(피해자보호명령)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15조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18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법원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스토킹행위자”로, “가정폭력범죄”는 “스토킹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

제20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5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제16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17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②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스토킹행위자”로, “가정폭력범죄”는 “스토킹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1조(보호명령불이행죄) 제15조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17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기대효과

■ 스토킹의 범죄화를 통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 「스토킹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으로부터 여성의 안전과 피해 방지
 - 스토킹은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처럼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기 쉬워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스토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스토킹 행위자 처벌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이 가능해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참조.

참고자료



-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이비박스과 익명출산”,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2014.
- 김상용, “베이비박스과 익명의 출산: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研究』 제54권 제4호, 2013.
- 김성룡, “독일의 ‘스토킹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2007.
- 김승권 외, 『2007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8.
- 박선영 외,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Ⅰ) - 낙태규제와 여성의 대표성 관련 심층 분석 및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박철현 외,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박희영, “독일의 스톱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2007.
- 송효진·박복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년: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안문희, “프랑스법의 익명출산제도: 2003년 2월 13일 유럽인권법원판결 (ODIEVRE c. FRANCE)과 관련하여”, 중앙법학회, 『中央法學』 제15권 제4호, 2013.
- 원민경,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방향”, 한국여성의전화, 『스토킹범죄처벌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토론회 자료집, 2013.
- 이건호 외,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여성부, 2002.
- 이기현, “스토킹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제2호, 2002.
- 이성용, 『스토킹 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 작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2.

- 이승우,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제2권 제1호, 2011.
- 조훈, “위법성 인식으로서의 Mens Rea”,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 연구』 제5권 제2호, 2003.
- 황정임 외,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3.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Women’s Safety』, Australia, 1996.
- Lamplugh, D. and Infield, P., “Harmonising Anti-stalking law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2003.
- Michele Black et al.,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2010 Summary Report』,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 Nirupa Dattani and Preeti Datta-Nemdharry and Alison Mcfarlane, 『Linking maternity data for England 2007: methods and data quality, Health Statistics Quarterly 53 Spring 2012』, 2012.
- Paul E. Mullen et al., 『Stalkers and their victim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Patricia Tjaden and Nancy Thoennes, Stalking in America: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1998.
- Robert C. Davis et al. (eds.), 『Victims of Crime』, SAGE Publications, 2012.
- Susan van der Aa and Renée Römkens, “The state of the art in stalking legislation - reflections on European developments”, 『European Criminal Law Review』, 2013.

주관부처 : 법무부(여성아동과),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
관계부처 : 법무부(여성아동과),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